

UIA 협정과 한국건축의 선택

UIA Accord and The Choice of Korean Architecture

심영섭 /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him Young-Sub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설계응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부문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UIA(국제건축가연맹)에 위임하여 작성된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권고기준에 관한 UIA 협정」이 지난 6월말 열린 제 21차 UIA 북경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한마디로 건축설계 응역의 국제적 시장개방을 위해 건축전문직(건축사)의 상호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UIA는 이 협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회원지부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각 회원지부에 협정내용의 수용을 요청 내지 권유하¹⁾였지만, 이러한 ‘권고기준’이 경제논리에 기반을 두고 막강한 구속력을 지니는 WTO의 건축사부문 상호인정협상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판단기준’이자 ‘실무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협정의 수용 여부는 각 나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지만, UIA의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WTO의 상호인정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그 나라는 건축설계부문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 뻔한 이치이다. 한국이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우리의 건축전공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외국의 대학원으로 현재처럼 곧장 진학하는 길이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막히게 되고 국내 건축사의 해외업무 수주는 물론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기준의 설계경기와 업무 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다방면에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UIA의 권고기준에는 건축사의 기본요건으로부터 전문성 충족을 위한 건축교육과 실무훈련의 내용 및 기간,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능력의 입증, 등록/ 자격면허/ 자격증명, 계속교육 등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의 어느 건축관련 단체나 개인도 이 협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부분의 건축관련학과가 공과대학 소속으로 건축가교육과 엔지니어교육이 병행되어온 국내의 상황에서 볼 때 UIA의 기준을 충족키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체제나 건축사 관련제도에 변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기 배출된 건축사나 졸업생들의 전문성 인정 여부 또한 문제시 된다. 우리와 건축교육 및 건축사 관련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온 반면,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근에 와서야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등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뒤늦은 대응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도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거나 기존의 체제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편협한 시각이 지배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자신이 속한 단체나 이해관계에 따라 임시방편의 묘수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UIA의 권고기준은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우리도 한국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의 장점을 살려 국제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배출 인력에 대한 적절한 경과조치나 추가교육을 통한 구제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는 국내의 어느 대학도 UIA 기준에 합당한 건축교육의 여건과 내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의 모든 건축사나 건축관련 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우라 판단된다. 모두에게 적당히 좋은 묘수를 찾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독특한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국제사회가 관대하지도 않은 듯 하다. 공학적 내용이 많이 포함된 우리의 건축교육이나 건축사 제도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UIA의 권고기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UIA 협정의 내용이 절대기준은 아니지만 이를 실무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리라 예상되는 WTO의 건축사부문 상호인정협정이 다자간의 상대적인 협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 현재 건축교육이나 실무의 전문성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가 얼마나 될지를 손꼽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생각보다 밝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는 유럽의 식민지 시절부터 유럽식 건축교육과 실무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한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제적인 무대에 뒤늦게 합류하였고 아직은 우리에게 많이 뒤져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조차 여러 해의 준비를 거쳐 다수 대학의 건축프로그램이 미국의 건축교육 인증기관으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았고 실무에 있어서도 UIA 협정에 상응하는 기준을 마련한 상태이다. 일본이 우리와 건축적으로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문성이나 내용이 대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형식과 태생적인 가계가 유사함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기존의 기득권에 집착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나 다름없다. 국제적인 시각과 합리적인 대책은 소홀히 하고 신토불이만 외치다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을 든 쌀시장 개방의 전철을 건축계는 밟지 말아야 한다. 식량안보를 내세워 전국민적인 관심과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던 쌀시장 개방과 비교해 작금의 여러 건축적인 현안을 해결하고 수습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건축계의 몫이리 만치 우리가 기댈 곳 또한 많지 않다. 많은 것이 아직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만간 건축직능에 대한 국제적인 상호인정협상이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 이때에는 냉정한 경제논리가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된다. 건축의 문화성이나 지역적 특수성 등이 개입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쌀시장 개방이나 IMF 구제금융이 우리의 희망과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피한 차선책이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국민을 진정 분노하게 만든 것은 현실의 오도와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인한 손실, 서로간의 책임 회피에 있었다.

결국 남아있는 선택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건축계에 꾸준히 인식시키는 한편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지를 모으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대응책은 수구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사분오열 되어있는 건축계가 새로운 위상정립과 더불어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 동안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건축교육계와 실무계가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며, 모호한 건축교육의 내용 및 체제의 정비와 함께 건축전문직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더 불어 한국의 현대건축이 태생적으로 짊어져 온 일본건축의 서자라는 불행한 족보를 떨쳐버릴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건축계가 국내·외적으로 고난에 처해있는 상황이지만 2000년대를 위한 한국건축계의 새로운 기반과 비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건축인 모두의 관심과 협조, 격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건축계가 걸어온 질곡의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